

한동훈 “사면, 대통령 고유 권한”...8·15사면심사위 개최

사면심사위 위원장은 한동훈...위원들 ‘묵묵부답’ 9일부터 사면심사위 개최...최종 발표 12일 예상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9일 법무부는 오전 11시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 7층 중회의실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들을 심사한다.

당초 심사는 오전 9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폭우로 2시간 이상 늦춰졌다.

사면심사위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사면심사위 기준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심사위원들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11시45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이날 사면심사위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는 한 장관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연직 위원에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이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촉직 위원은 공무원인 이은희 충북대학교 교수, 공무원이 아닌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교수, 최성경 단국대학교 교수 등 5명이다.

이날 이 교수, 구 변호사, 김 교수 등 사면심사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윤 정부 사면 첫 기준’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논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사면 발표는 광복절에 앞선 1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은 주요 기업인 위주로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정치인 사면 등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사 대상자로 계속 거론돼 왔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번 가석방 때처럼 이번에도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이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은 확실시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 형기는 만료됐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신동빈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도 이번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주요 기업인 중 하나다.

황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6월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일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도 이번 사면 대상자로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도

사면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달 9일 출근길에 “과거 전례에 비해 이십 몇 년을 수감 생활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난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나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언급된다.

정승호기자

尹 “국민 숨소리까지 살필 것...정책 추진시 이해 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 목소리,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잘 살피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새 정부의 더 빠르고 더 큰 변화와 삶에 와 닿는 혁신을 원하고 계신다”며 국무위원들에 대국민 소통을

“국민들은더 큰 변화, 삶에 와닿는 혁신 원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동안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이 되돌아왔다.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깊게 새겼다”며 “우리 모두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타상공공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영해서 정책이 현장에 미칠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와 고려를 해야 한다”며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남 사퇴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취약연령 하향(만 5세 입학)’ 정책을 공론화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빚은 논란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국민 뜻을 받들겠다”며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는 22일부터 진행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 “지난 5년간 형식적으로 진행된 연습을 정상화하면서 연합군사 연습인 프리덤실드와 통합시행한다”

며 “이는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을지연습은 변화된 전쟁양상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연습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비과세 한도를 19년 만에 두배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소득세법 등을 의결했다.

또 미성년자의 빛 대물림을 막기 위해 성년이 된 이후 미성년자에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두번째로 주재하는 이날 국무회의는 당초 세종정부청사에서 갖기로 했으나 수도권 폭우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긴급 회의 후 국무회의를 이어 개최했다.

최이슬기자

한숙경 도의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12대 조합회의 신임 위원으로 선임

미래 신성장 기업 유치 통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당부



고를 청취하고 당부사항을 전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경남 하동군, 광양만권 4개 시·군에 걸쳐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다. 조합회의는 조합규약 및 조합규정 제·개정안, 예·결산안,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조정 등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조합위원으로는 전남도의원 3명을 포함한 전남 7명과 경남 3명, 산업통상자원부 1명 등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제12대 조합회의 신임 위원으로 선임된 한숙경 의원은 “광양만권 발전을 염원하는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산업·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활동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미래 신성장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들이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 의원은 지난 제364회 임시회 첫 업무보고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민원한 정책 분석과 제안으로 눈길을 끌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